

국제개발협력에서 문화와 발전 논의의 전개와 한계, 그리고 관계적 장소 개념의 필요성

김숙진*

Culture and Development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he Need for the Concept of 'Relational Place'

Sook Jin Kim*

요약 : 근대화 이론과 경제성장 위주로 진행된 과거의 개발 패러다임이 1980년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이에 대한 대안과 돌파구로 개발을 경제성장을 넘어서 총체적인 사회발전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등장했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개발의 접근법으로서 또 수단으로서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포스트개발 이론들은 유럽중심주의의 개발 개념을 파괴하고 동시에 포스트식민사회의 문화 회복, 지역 자체의 내생적 개발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대안적 개발 개념을 제시하였고, 공동체, 여성, 개발주권, 참여를 강조하는 신포퐁리즘개발의 움직임도 등장하였다. 국제기구 역시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문화와 발전 관계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켜나갔다. 본 논문은 개발학과 포스트개발, 국제기구에서의 문화와 발전 논의의 전개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문화 개념이 이전시기와 질적으로 다르게 변화했긴 했지만, 본질적으로 문화를 구별되고 경계가 지워진 특수한 것으로 본다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리학의 관계적 장소관을 적용하여 재개념화함으로써 항상 외부와의 관계를 통해 내부적 혼종성과 다양성을 가진 것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주요어 : 문화, 발전, 개발, 다양성, 포스트개발, 유네스코, 관계적 장소관

Abstract : The development paradigm based on modernization theory and economic growth since the WWII reached an impasse in the 1980s. As an alternative, the new perspective on development as a whole social development beyond economic growth has emerged, and culture as an important method for as well as a approach to development has been emphasized. Post-development theories destruct the European development concept and suggest alternative developments emphasizing culture restoration, endogenous growth, diversity, and neopopulist developments movement emphasize community, gender, ownership, and particip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UNESCO have also examined and developed the relations between culture and development. Although different from that of the past development paradigm, acknowledging other cultures, however, this elaborated concept of culture has some limitations and need to be reconceptualized through applying the geographical concept of 'relational place.' The concept of relational place can help recognize internal diversity within culture and community and link them to a broader economic and political contexts.

Key Words : culture, development, diversity, post-development, UNESCO, relational place

* 건국대학교 지리학과/대학원 세계유산학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Geography Department, College of Science/World Heritage Studies, Graduate School, Konkuk University), sjkim@konkuk.ac.kr

1. 서론

한국은 과거 일제 식민지배로부터의 해방과 한국 전쟁 이후 해외원조의 수원국이었다가 공여국이 된 이례적인 사례이다. 1950년대부터 원조를 받다가 1980년대 들어서 해외개발원조를 종결하며 공여국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대부분이 유상원조의 형태를 띠었다는 한계를 가졌다.¹⁾ 국가적인 종합적 체계와 계획을 가지고 원조가 이루어진 것은 2000년대에 이르러서이다. 2006년 국제개발협력²⁾과 관련된 정부의 주요정책 및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의 심의위원회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설치되면서 비로소 2007년부터 매해 ‘ODA 추진 계획’이 수립되어 이에 따른 원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후 한국은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법적 체계를 갖추었으며, 같은 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명실상부 국제적으로 공식적인 선진 원조 공여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이때부터 한국은 1년이라는 단기간의 계획뿐 아니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기 원조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2011~2015년 기간을 대상으로 제1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해 분야별 원조 추진 계획과 원조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하였고, 올해는 2016~2020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발표해 변화된 국내외 국제개발협력 환경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였다. 최근의 국내 경기 침체와 2015년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발의라는 국제규범의 변화에 따라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에도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해진 것이다.

한국의 DAC 가입은 OECD가 설립된 1961년 이후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전환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 기존의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원조 공여국은 대부분 과거 식민지 지배의 경험이 있는 글로벌 북부(Global North)의 선진국

이며, 수원국은 대체로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개발도상국으로 이루어진 글로벌 남부(Global South)의 국가들이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위치 변화는 이러한 체제에 균열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한국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과 인도 등 과거 식민지를 지배한 경험이 없거나 오히려 피식민지였던 그야말로 포스트식민국가인 개발도상국들의 공여국으로의 변모는 기존의 국제개발협력의 북-남 구도에 균열을 내며 남-남 구도를 형성하고 지금까지의 개발의 규범과 형태를 재구성하고 있다(김태균, 2016).

또한 과거의 국제개발협력이 근대화 이론이나 개발경제학을 위주로 한 선진국 중심의 개발 이론과 실천이 이루어진데 대한 비판이 포스트개발(post-development) 학자들을 중심으로 1990년대부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포스트개발 관점은 ‘개발’이라는 개념 자체에 비판적이며 이에 대한 대안적인 사유의 방식을 일컫는다. 즉 이들은 그간 개발에 내재한 유럽중심주의와 식민주의 관계의 지속성에 문제제기를 하며, 내생적인 개발을 지향하는데 초점을 둔다(Escobar, 1995; Pieterse, 2000; Sidaway, 2007; 이용균, 2015). 이와 더불어 2015년 유엔이 제시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는 2000년 제시된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와 달리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인권, 환경, 경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면서 개발목표의 대상을 선진국까지 포함한다는 측면에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규범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 자본주의의 성장과 함께 최근의 자본이전과 그로인한 개발과 불균형 양상이 주변부 국가들뿐만 아니라 중심부 국가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김태균, 2016, 244-5).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이러한 지형의 변화는 개발협력이 기존의 개발도상국 빈곤퇴치라는 협의의 의미에서 지역의 포괄적이고도 총체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광의의 목표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변화양상을 국제개발협력의 패러다임 변화로 규정짓고자 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개발협력을 위한 접근법으로서, 또한

수단으로서 문화의 역할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먼저 지금까지의 국제개발협력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 ‘담론으로서의 개발’ 개념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고찰한다. 둘째, 개발 논의를 교착상태에 이르게 한 주요 요인들과 이후에 나타난 포스트개발, 반개발, 신폴리즘개발 움직임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 개념이 등장하게 된 맥락을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개발학과 국제기구에서 문화와 발전 논의의 전개 과정과 변화를 검토하고 각각의 의의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문화와 발전 논의에서 등장하는 문화다양성, 공동체, 참여와 같은 개념들이 개발의 실천이라는 국면에서 적용되는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관계적 장소/공간관’과 같은 지리학적 관점의 적용을 통해 재개념화될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담론으로서의 개발 개념

‘개발’ 개념의 기원은 17세기 중반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독일 철학에서 처음 확립되었다.³⁾ 당초 개발이라는 것은 구체적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후에 가서야 전체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변화와 같은 좀 더 추상적인 현상에 적용되었다. 유럽의 계몽주의 초기 단계에 개발은 기 존재해 온 잠재력을 펼치는 것(deployment), 즉 처음부터 잠재적으로 거기 있어왔던 것을 현실화시키는 것을 의미했다. 프랑스 혁명 기간 동안 등장하게 된 근대적 사고의 맥락에서는 국가를 통한 사회적 실재(realities)와 전체로서의 사회의 생산가능성(producibility)을 가정하는데, 개발 개념이 두 가지 주요 측면을 구성하게 되었다. 첫째, 사회적 실재의 발전을 위한 국가 개입의 필요성과 둘째, 사회진화(evolution)라는 개념이 그것이다. 후자, 즉 사회진화 개념은 개발이 가진 초기 의미가 근대 과학, 특히 생물학에서 나온 진화론적 사고와 결합되었던 19세기에 더욱 보편화되었다(Six, 2009). 개발에 대한 이러한 진화론적 해석에 따르면 비 유럽의, 전 근대적 부족들과 민족들 등등은 유럽 발달의 초기 단계와 동

일시된다. 따라서 전근대는 유럽 자신의 과거를 보여준다. 이렇게 유럽과 비유럽의 차이의 지리가 선형적인 역사관으로 치환되면서 ‘비동시적인 것의 공존’ 상태가 된 것이다. 유럽의 시각에서 비유럽적인 것은 결국 유럽의 초기 단계로 환원되고, 그 자체의 구분되는 특징이나 발전적 특수성(developmental specificities)은 가지지 못하게 된다(Escobar, 1995; Six, 2009). 근대사회, 즉 유럽 그 자체는 개발과 개발의 여러 단계에 대한 절대적 지식을 갖춘 역사의 보편적인 주인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의 나머지에 대해서는 결정적 규범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식민주의와의 결합은 두 가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하나는 개발의 초점이 유럽이라는 ‘자아’로부터 다른 ‘타자’에게로 옮겨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자신을 개발하는 것이 누군가 다른 사람을 개발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이다.⁴⁾ 둘째는 지리적 초점이 서구에서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등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서구와 광범위한 나머지 세계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개발 패러다임의 출발점이 되었다(Six, 2009, 1105). 개발의 대상이 ‘자아’가 아닌 ‘타자’로 변하면서 식민주의에서는 개발의 필요성을 타자의 인종적, 문명적 열등성에서 찾았다. 즉, 식민적 인종차별주의에서는 피식민화된 자들은 자치할 능력이 없다고 보았고, 이 주장은 오랫동안 식민 지배와 경제적 부의 유출을 전반적으로 합법화하는 기능을 발휘했다. 따라서 식민주의는 스스로를 경제적, 정치적으로 선진적이라고 여기는 국가와 사회의 정치적·경제적 헤게모니의 투영으로만 해석되어서는 안 되고 식민국가와 식민화된 국가 간 분명한 구별과 문명의 위계에 기반한 문화적 관계로도 해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화적 위계는 근대 식민국가와 전근대적 혹은 전통적 피식민국가간 이분법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문명적 함축은 20세기 동안 좀 더 세련된 개발 위계에 의해 대체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피식민지 국가가 탈식민화되면서 종전의 식민주의적 관계에 의한 부의 유출은 지속될 수 없게 되었고, 식민적 인종차별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도 쇠퇴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전의 문명국과 비문명국간 차이는 이

제 선진국과 저개발국 간의 차이로 대체되는데, 여기서 진보(progress)란 본질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하여 생산성과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그리고 전통에 대비하여 근대성의 관점에서 정의된다(Six, 2009). 이러한 개발 개념은 전후 냉전 상황 속에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 명확하게 개념화되었다. 미국은 사회주의권의 세력 견제를 위해 한편으로는 전후 유럽의 재건·부흥 계획인 마셜 플랜을 지원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세계를 개발 국가(선진국)와 저개발 국가로 구분하였다(박경환·윤희주, 2016; 이용균, 2015). 즉, 트루먼의 개발 담론은 글로벌 남부의 다양한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체를 빈곤, 저개발 상태에 놓인 것으로 동질화함으로써 세계를 선진국과 저개발국의 이분법으로 구분한 것이다.

이러한 개발 개념은 1960년대 미국의 대외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 역사경제학자인 월트 로스토(Walt Rostow)에 의해 이론적으로 뒷받침되어 공고화되었다. 로스토는 1960년 그의 저서 ‘경제성장의 단계: 비공산당 선언(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A Non-Communist Manifesto)’을 통해 전통적 사회가 준비 단계를 거쳐 도약(takeoff)함으로써 경제적 근대화가 이루어짐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근대화 이론에 의하면 각국은 하나의 연속선 또는 ‘개발의 사다리’ 위에 위치하며, 서구의 산업경제 모델을 적용하면 그들과 비슷한 수준이 되는 것이다(조효제 역, 2013).

전후에 등장한 UN, GATT 등 국제기구들은 각국의 빈곤률, 실업률, 성장률, 국민총생산 등 측정 가능한 수치를 생산함으로써 국제 간 개발의 척도로 이용될 수 있게 하였으며 자연스럽게 경제적 성장 여부에 따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구분되게 되었다(이용균, 2015). 선진국과 신생 독립국이 대부분이었던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적 격차는 이미 확인했으며 이런 저개발 국가들의 개발 필요성은 선진국이나 저개발국이나 비슷하게 공유되었다. 필립 맥마이클(Philip McMichael)은 미국과 저개발국들 사이에 큰 권력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쪽이 개발에 대한 비슷한 정서를 공유하고 있는 것을 탈식민화와 개발 사이의 연계성, 즉 신생 독립국이 선진국의 도움을 받아 국

민 경제 성장을 추구함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분석한다(조효제(역), 2013, 98-99). 이는 트루먼 대통령의 온정주의적 선언이 비록 이전시대의 낡은 제국주의와 분명한 선을 긋고 민주적으로 공평한 방식을 추구하는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의 대외원조 정책에 담긴 개발 담론은 중심부-주변부의 이분법적 관계에 기반한 서구 의존형 개발 계획을 함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분법적 논리는 개발 패러다임 틀 속에서 각기 다른 형태를 띠어 온 역사적 연속체라 할 수 있다. 즉, 개발 개념은 19세기의 개발 패러다임의 생성으로부터 식민주의로, 마침내는 탈식민의, 전 세계가 노골적으로 개발 지향적인 시대로 연속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이분법들의 공통점이 이들이 단순히 역사적, 정치적, 혹은 경제적 실재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의 원인을 내재화하고 국가적 스케일에 고정시키며 저개발국에서의 선진국의 활발한 개입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분법은 단순히 사실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치적, 경제적 질서를 합법화한다는 점에서 고도로 규범적인 것이다. 규범적 특성 속에서 이들 담론 유형들은 현상을 고착화하려는 의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와 자선적 개발 ‘원조’라는 미명으로 비판을 잠재우려 하는 의도가 있다. 맥마이클(McMichael)은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 덕분에 전후 국제 경제의 새로운 제도적 구조 속에 제1세계의 영향력과 특권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고 한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개발 담론이 국민국가들로 이루어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청사진이었고 더 나아가 세계 질서 유지를 위한 특정한 전략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개발 프로젝트’로 인식하였다(조효제(역), 2013, 100). 이러한 이분법에는 지리적 타자에 대한 몰역사적이고, 관념화되고, 그리고 정적인 관념이 배태되어 있는 바, 한국, 중국, 인도 등과 같은 새로운 원조공여국의 등장과 문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관계에 대한 최근의 논의는 이러한 개발 관점과 전략에 근원적인 문제제기를 하며 균열을 내고 있다.

3. 개발학의 교착상태와 포스트개발

트루먼 대통령의 대외원조 정책으로 촉발된 개발 개념과 전략이 실질적으로 전후 세계의 개발 문제와 실천을 이끌면서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 초에는 개발을 학술적으로 논의하는 개발학(Development Studies)이라는 학문이 등장하였다. 근대화 이론이 개발의 지향성과 비교 연구 방법론에 공헌을 하였다면, 마르크스주의에 영향을 받은 종속이론은 사회과학으로서 개발학이 가져야 할 규범적이고도 진보적인 정치적 특성에 영향을 주었다. 1970년대에 종속이론가들은 근대화 이론이 제국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면서 맹렬히 비난했으며, 반대로 근대화 이론가들은 종속이론가들을 포퓰리즘에 기댄 사이비 연구자라며 반격하였다. 이런 논쟁 속에서 개발학은 논의의 풍부함을 기반으로 사회과학의 새로운 학문분야로 자리 잡게 된다. 많은 대학들이 제3세계 연구 센터를 만든 것도 이 즈음이다(Schuurman, 2008).

그러나 1980년대에 개발학 분야는 전환점을 맞게 된다. 데이빗 부스(David Booth)는 그의 1985년 논문에서 최초로 개발 논의의 교착상태에 대해 논하였고, 이후 다른 학자들이 비슷한 논의를 이어갔다(Booth, 1985; Vandergeest and Buttel, 1988; Corbridge, 1990). 개발 논의를 교착상태에 이르게 한 주요 요인은 시기적 순서에 따라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개발 이론에서 예측한 것과 달리 글로벌 남부에서 개발의 실패와 (저)개발 경험의 다양성이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개발의 결과로서 글로벌 남부에서의 빈곤의 심화, 즉 개발의 실패는 자생적 성장(self-sustained growth)과 낙수효과(trickle-down process)를 중요 개념으로 하는 근대화 이론의 실패를 뜻하는 것이었다. 종속이론 또한 제3세계 국가들 간 나타나는 성장의 차이와 일부 선망의 대상이 된 사회주의 국가의 발전 경험을 설명하지 못했다. 특히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저개발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적 프로젝트로서 사회주의의 당위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었다. 둘째, 1980년대 이후 등장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사회과학 전반에 대한 비판은 근대화, 구조주의와 같은 거대

담론에 의존하고 있는 개발 이론에도 문제제기를 하기에 이른다. 포스트모던의 해체적 방법론은 개발 개념의 이면에 있는 진화론적, 보편주의적, 환원주의적 측면을 드러내었고, 이러한 개발에 대하여 사회·경제적 다양성에 기반한 대안적 개발 개념에 대한 공간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Schuurman, 1993). 개발 논의를 교착상태에 이르게 한 세 번째 요인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이를 둘러싼 국가의 역할 변화이다. 개발의 주체로서 국가의 중요성은 근대화 이론이나(네오) 마르크스 개발 이론(예를 들어 종속이론의 수입대체산업 강조) 공히 마찬가지다. 사회과학으로서 개발학은 불균등과 개발 궤적의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측면을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하는데 이 연결의 핵심 행위자는 국가였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경제적으로는 민영화와 탈규제로 인한 국가 역할 감소, 정치적으로는 국제기구의 역할 증대와 지방 정부의 역할 증대, 문화적으로는 국가 정체성이라는 개념이 약화되고 대신 코스모폴리탄이나 민족적(ethnic) 또는 지역적 정체성의 중요성이 증대하였다(Schuurman, 2008; Sidaway, 2007).⁵⁾ 이렇게 변화된 환경 하에 기존의 개발 이론들은 분석의 힘을 잃게 되었다.

개발학의 교착상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통적인' 개발 패러다임 또는 '개발 프로젝트' 패러다임의 위기, 더 나아가 변화를 뜻한다. 따라서 교착상태 이후에는 이론적으로나 실천적 측면에서나 개발이 좀 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계속되는 원조에도 불구하고 저개발 국가는 더욱더 빈곤해지고 선진국간 경제 격차가 심화되면서 일부 개발도상국들은 1980년대 누적채무 위기를 맞았고, 1990년대에는 선진국 또한 경제 불황으로 원조피로 현상이 나타나 원조액이 급감하기에 이른다. 개발도상국의 거시경제지표 개선, 즉 경제성장만을 위한 국가대 국가의 직접적 원조대신 환경과 여성과 같은 새로운 과제가 등장하고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통화기금(IMF) 위주의 신자유주의 개발 패러다임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개발의 딜레마에 대한 급진적인 대응으로 반개발(anti-development), 포스트개발(post-development), 그리고 대안적인 개발의 방식을 제안하는 신포퓰리

즘 개발(neopopulist development) 등의 움직임이 생겨났다(Blaikie, 2000; Pieterse, 2000). Escobar(1995)와 같이 개발 자체를 부정하면서 서발탄(subaltern)과 원주민들의 사회운동을 통해 전면적인 저항을 주장하는 반개발론자들, 개발에 대한 포스트모더니즘/포스트구조주의 비판에 근거해 내생적 개발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포스트개발, 그리고 새로운 정치(new politics)에 기댄 신폴리즘 개발은 각각이 주장하는 바가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고, 이를 주장하는 학자들 간, 전문가, 실천가, 활동가들 간의 지적, 정치적 위치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기존 개발방식과는 다른 탈중심적인, 커뮤니티 기반의, 참여적, 원주민 중심의 발전을 강조한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개발에 대한 회의와 대안은 이전 시기의 개발과 절연된 전혀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이전 시기 개발 관련 저작과 사유 내에서 이미 존재해 왔던 비판들의 최근 버전이라고 평가하면서 대안들이 가지는 모호함을 비판하는 이들도 있다(Curry, 2003; Kiely, 1999; Watts, 2003 참고).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포스트개발과 같은 비판을 통해 지금까지의 서구 중심의 개발이 세계를 바라보는 특정한 방식을 규정해 왔던 것이며, 그것으로 인한 결과에 민감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지리적 타자에 대한 몰이해를 극복할 수 있고 개발의 과정을 문화적 다양성과 지역적 맥락에 위치시키는 등 다른 시각의 가능성을 연다는 것이다.

4. 문화와 발전 논의

1) 개발학, 포스트개발 논의에서의 문화와 발전

개발학에서 문화에 대한 관심은 새로운 움직임이 아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개발에 있어서 문화의 역할은 근대화 이론이 지배적인 개발학내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왜 어떤 사회는 발전한 반면 다른 사회는 발전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저개발 사회가 근대화되고 발전하게 되는가를 설명할 때 문화

는 전통 사회와 근대 사회를 구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근대화 이론은 서양의 문화적 특성과 가치의 획득을 통해 개발이 성취됨을 당연시하였고 개발도상국에서의 개발은 서유럽과 미국을 닮아가도록 했다. 즉, 개발의 과정에 있어 수원국의 문화는 선진 공여국의 '근대'와 대조되는 '전통'으로 치부되어 개발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전통-근대의 구분은 동등한 이분법이라기보다는 문화적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Schech and Haggis, 2008). 또한 개발도상국의 문화적 소수자나 원주민의 정체성과 문화는 국민국가의 통일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쉽게 지지받지 못하기도 하였다(정정숙, 2012). 이러한 전통과 근대의 이분법은 문화를 경계가 지어진 분리된 개체로 보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즉, 문화는 사회적 관계와 실천, 상징적 시스템의 특별한 일련의 구조로 구성된 경계가 지어진 분리된 개체로, 이러한 일련의 구조로 구성된 문화는 사회, 국가, 커뮤니티 또는 계급과 같은 응집된 집단 단위를 형성한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맑시즘에 영향을 받은 불균등 발전 이론(종속이론), 그리고 신자유주의간 논쟁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문화는 경제학적 또는 정치경제학적 분석에 밀려 주류 개발 아젠다에서 빠지게 된다. 그러나 두 접근법 모두 당시 개발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면서 개발학의 교착상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일부 학자들은 개발에 대한 새로운 분석적 도구를 위해 문화 연구, 포스트식민주의 연구, 세계화에 관심을 돌리게 되었다. 이런 접근법들은 문화에 대한 좀 더 역동적이고 광범위한 정의를 제시하는데, 여기서 문화는 '사회적 삶의 모든 측면을 모양 지우는 '재현들 - 텍스트, 이미지, 대화, 행동 규칙, 그리고 이들을 조직하는 서술적 구조들 - 의 네트워크(a network of representations)'로 간주된다(Frow and Morris, 1993, viii; Schech and Haggis, 2008, 51에서 재인용). 문화를 정의함에 있어 재현과 권력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서구사회의 문화적 지배와 서구에 의한 개발도상국 사회의 문화적 재현을 비판하고 권력관계를 분석의 중심에 위치시키는 포스트식민주의 연구의 영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포스트식민

주의에 영향을 받은 포스트개발 이론가들이 기존의 개발 이론에 담긴 '진보'에 대한 표준적인 가정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유럽중심주의적 시각에서 비롯된 '타자'로서의 개발도상국의 동질화에 문제제기를 하며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관행과 상황에 대한 존중, 문화 회복, 개발 과정에서의 민주적 참여와 자립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적인 개발 방식을 지향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이다(Sidaway, 2008).

이것은 기존의 국가 주도의 개발담론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며, 빈곤의 원인과 개발의 주체를 개인으로 환원하는 신자유주의 개발 담론의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이용균, 2015).⁶⁾ 국가 간 교역 확대, 기술과 자본의 이동, 세계 시장의 통합과 같은 세계화를 통해 전 지구적 생산과 소득이 증가한다고 믿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오히려 개발과 불평등의 문제를 심화시켰으며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 내에서도 개발의 불평등과 소외를 심화시켜 개발의 문제가 더 이상 글로벌 남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전 세계적 현상으로 나타나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저항과 불만은 점점 더 문화를 통해 표현되고 있다(Schech and Haggis, 2008).

2) 국제기구에서의 문화와 발전 논의

개발에 있어 문화에 대한 강조는 포스트개발 학자들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에서도 1980년대부터 논의되어 왔다(표 1). 계속되는 개발원조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남부에서의 개발의 결과가 미비하고 1990년대 들어 공여국들도 원조 피로감에 직면하면서 원조효과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개발 개념 자체에 대한 재인식과 공여국의 문화 다양성을 인식한 대안적 접근법들이 유네스코,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총회와 같은 국제기구들을 통해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유네스코 정부 간 회의로 1982년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된 세계문화정책회의(World Conference on Cultural Policies)에서는 문화 개념과 문화와 발전간의 관계에 대해 과거보다 발전된 인식이 제시되었다.⁷⁾

선언문에 따르면, 모든 문화는 독특하고 대체 불가능한 가치의 본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각 민족(people)의 전통과 표현의 양식은 그들이 세계 속에 존재함을 나타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주장은 인간의 해방에 공헌하며, 반대로 어떤 형태든 지배는 그러한 정체성의 부정 또는 손상이 된다. 특정 민족의 문화는 다른 민족의 전통과 가치와의 접촉을 통해 새로워지고 풍성해지며, 따라서 다양한 전통이 함께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의 존재가 바로 문화적 다원성의 핵심을 구성한다. 이런 맥락에서 문화정책은 각 민족의 정체성과 문화 유산을 보호함과 동시에 풍요롭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문화적 소수자와 세계의 다른 문화에 대하여 절대적 존중을 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선언문은 모든 문화의 동등함과 존엄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모든 민족과 문화적 커뮤니티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하고 보전하기 위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했다. 발전과 관련해서는, 문화가 개발 과정의 근본적인 측면을 구성하며 민족(인간)의 독립과 주권, 정체성을 강화시킨다고 보았다. 성장이 주로 양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인간의 정신적 문화적 열망의 만족과 같은 질적 측면을 간과하였다고 보고, 진정한 개발의 목표는 모든 개인의 행복(well-being)과 성취(fulfillment)여야 함을 강조하였다(UNESCO, 1982).

1982년의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유네스코는 1988년 '세계문화발전 10년(World Decade for Cultural Development)'(1988~1997)을 선포하면서 본격적인 문화와 발전 논의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1991년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유엔 사무총장과 함께 "발전의 맥락에서 문화적 요구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긴급한 그리고 장기적인 조치를 위한 제안서로서 문화와 발전에 관한 세계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독립적인 세계문화발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Culture and Development)를 구성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 결의안은 몇 주 후 유엔 총회에서 받아들여졌고, 그 결과 1992년 세계문화발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들은 1993년 작업에 착수하여 1995년에 보고서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Our Creative Diversity)'을 발간하였다(UNESCO,

표 1. 문화와 발전 논의의 전개

년도	국제회의·결의문·협약	문화와 발전 주요 내용
1970	‘문화정책에 관한 정부간회의’(베네치아)	개발을 위한 국가정체성의 확립 강조
1982	세계문화정책회의(멕시코시티)	각 민족의 문화정체성은 인간 해방에 공헌, 모든 문화의 동등함과 존엄성, 문화가 개발 과정의 근본적인 측면을 구성
1988~1997	유네스코 ‘세계문화발전 10년’ 지정	본격적인 문화와 발전 논의
1995	세계문화발전위원회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 발간	포괄적 개발 개념, 문화(태도와 삶의 방식)는 모든 종류의 자원들을 관리하는 방식을 좌우하므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 세계화와 개발이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의 상실 초래, 전통의 관점에서 근대화, 개발에 참여 필요.
1998	발전을 위한 문화정책 정부 간 회의 (스톡홀름)	성, 계급, 민족 등 개인의 문화적 차이의 인정, 문화 간 대화 촉진위한 환경 조성의 주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 정부의 역할 강조
2001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	문화다양성은 개발의 근간 중 하나, 문화적 권리가 인권의 필수적 구성요소
2004	UNDP 문화적 자유를 주제로 ‘인간개발보고서’ 발간	문화적 자유를 확장하는 것이 개발의 선제조건, 다문화 정책 확립의 중요성, 빈곤퇴치와 MDGs를 위해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포용적인 사회가 중요
2005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	지속가능한 발전 위해 문화를 개발정책에 통합할 필요(범분야이슈), 문화는 개발의 한 분야(문화산업)
2010, 2011	유엔, 문화와 발전에 관한 결의안 채택	문화가 개인과 공동체를 위한 정체성, 혁신, 창의성의 근원, 경제 성장과 개발 과정의 개발주권을 제공,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원주민 지식의 중요성, 문화다양성과 생물다양성과의 관련성
2013	향저우 문화와 발전 국제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동인으로서 문화를 Post-2015 개발 아젠다에 포함시킬 필요성, 공동체 차원의 문화권, 문화권 환경 조성의 주체로서 공동체 강조
2013	유엔, 문화와 발전에 관한 결의안 채택	향저우 국제회의의 내용 반영

1995).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환경과 개발’이 국제사회에서 의제화되는 길을 그대로 따르고자 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United Natio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의 10주년 후속 조치로 1983년 유엔 총회는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일명 브룬트란트위원회(Brundtland Commission)를 설립하였고, 이들이 1987년 ‘인류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은 1992년 리우환경회의를 통해 더욱 강화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1982년 문화정책에 관한 멕시코시티 선언문이 문

화정체성과 발전에 관해 원론적인 측면에서 개념을 규정한 것에 반해, 1995년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 보고서에서 제시된 문화와 발전에 관한 인식은 포스트 개발 논의나 UNESCO, UNDP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수용하기 시작한 개발 자체의 광범위한 개념뿐만 아니라 탈냉전과 세계화 등 전지구적인 변화를 반영한, 좀 더 맥락화된 것이었다. 보고서는 일단 개발의 경로가 문화마다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기준만으로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위한 개발에 도달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UNDP가 발전시킨 인간개발 개념 속에 문화가 함축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인간개발 개념은 사람들의 선택권을 확장시키는 과정으로, 이 개념에서는 개발을 좀 더 광범위한 능력, 즉 정치적, 경제

적, 사회적 자유에서부터 건강하고 교육적이며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자존감과 인간권을 위한 개인적 기회의 관점에서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⁸⁾ 더욱이 문화, 즉 태도와 삶의 방식은 모든 종류의 자원들을 관리하는 방식을 좌우하므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UNESCO, 1995, 7-10). 세계화와 관련해 보고서는 경제적 과정의 세계화와 더불어 문화적 과정의 세계화, 즉 글로벌 대중 문화의 확산이 다양한 문화의 발전을 약화시키는 현실을 인식하면서 실제로 탈냉전시대에 사람들이 자기 인식과 동원의 수단으로 자신만의 문화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많은 지역에서 대규모의 근대 기술로 인한 소외 현상과 산업화로 인한 이익의 불균등한 분배에 대한 대응으로 부족주의(tribalism)로 관심을 돌리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개발이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의 상실을 의미한다는 것에 주목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전통의 관점에서 근대화, 개발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함을 역설하였다(UNESCO, 1995, 15).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 보고서는 문화 개념의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좀 더 명확한 정책위주의 국제적 아젠다 - 창의성과 역량강화, 디지털 격차 해소, 젠더와 문화, 청년의 역할, 개발을 위한 문화 유산, 문화와 환경 - 를 제시함으로써 이후 '문화와 발전' 논의의 이정표가 되었다.

세계문화발전 10년이 끝난 이듬해인 1998년에는 스톡홀름에서 '발전을 위한 문화정책 정부간 회의(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n Cultural Policies for Development)'가 열렸는데 이 회의에서는 성, 계급, 민족 등 개인의 문화적 차이의 인정과 문화 간 대화 촉진의 필요성을 촉구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대화를 촉진하는 환경 조성의 주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UNESCO, 1998). 2000년대 들어서는 문화와 관련된 두 가지 국제 규범이 탄생하였는데 2001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세계문화다양성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을 채택하였고, 법적 구속력을 위해 이를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이하 문화다양성협약)으로 발전시켰다. 세계문화다양성선언 중 문화와 발전에 관한 항목은 제3조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화다양성은 모든 이에게 선택의 범위를 넓혀 준다. 문화다양성은 개발의 근간 중 하나이며, 단순한 경제 성장의 맥락에서 이해되기보다, 보다 만족스러운 지적, 감정적, 윤리적, 정신적 존재를 위한 수단으로 이해된다(UNESCO, 2001)." 이는 1980년대부터 이루어진 문화와 발전 논의들을 종합하여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선언 제5조는 1948년 유엔이 제정한 세계인권선언과 1966년 채택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참조하여 문화적 권리가 인권의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편적이고 불가분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성격을 띠며 명시하였다. 이는 차후 문화와 발전 논의에서 문화권(文化權)이라는 관점에서 개발의 전 분야를 바라봐야 한다는 범분야적 이슈의 기반이 된 것으로 보인다.

2005년의 문화다양성협약은 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한 발전과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드러낸 것이 특징이다. 제13조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화 통합(Integration of Culture in Sustainable Development)으로 "당사국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여건 조성을 위해 모든 차원에서 문화를 자국의 개발 정책에 통합시키는 노력을 해야 하며, 이러한 틀 안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과 관련된 측면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4조, 발전을 위한 협력(Cooperation for Development)에서는 "당사국은, 특히 역동적인 문화 분야의 출현을 촉진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요구와 관련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 감축을 위한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 방법은 "(a) 개발도상국의 문화산업 강화, (b) 전략과 경영 역량, 정책 개발과 시행, 문화적 표현의 증진과 배포, 중소기업 발전, 기술 활용, 기술 개발과 이전 등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내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의 정보, 경험 및 전문지식의 교환과 인적자원 훈련을 통한 역량 강화, (c) 문화 산업과 기업 분야에서 적절한 인센티브 도입을 통한 기술 이전, (d) 재정 지원"이다(UNESCO, 2005). 두 조항을 비교하자면, 제13조가 문화를 개발에 대한 범분야 이슈로 다

문화다양성협약은 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한 발전과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드러낸 것이 특징이다. 제13조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화 통합(Integration of Culture in Sustainable Development)으로 "당사국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여건 조성을 위해 모든 차원에서 문화를 자국의 개발 정책에 통합시키는 노력을 해야 하며, 이러한 틀 안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과 관련된 측면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4조, 발전을 위한 협력(Cooperation for Development)에서는 "당사국은, 특히 역동적인 문화 분야의 출현을 촉진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요구와 관련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 감축을 위한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 방법은 "(a) 개발도상국의 문화산업 강화, (b) 전략과 경영 역량, 정책 개발과 시행, 문화적 표현의 증진과 배포, 중소기업 발전, 기술 활용, 기술 개발과 이전 등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내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의 정보, 경험 및 전문지식의 교환과 인적자원 훈련을 통한 역량 강화, (c) 문화 산업과 기업 분야에서 적절한 인센티브 도입을 통한 기술 이전, (d) 재정 지원"이다(UNESCO, 2005). 두 조항을 비교하자면, 제13조가 문화를 개발에 대한 범분야 이슈로 다

를 것을 제안하는 반면, 제14조는 문화를 발전을 위한 수단, 즉 개발의 한 분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90년부터 인간개발이라는 개념으로 개발에 관한 포괄적 개념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온 UNDP는 2004년 문화적 자유를 주제로 ‘인간개발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문화적 자유를 확장하는 것이 개발의 선제조건이고 다양성과 다원주의를 증진시키는 다문화 정책 확립의 중요성을 밝혔다. 또한 빈곤 퇴치와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해서는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포용적인 사회가 중요하며, 문화적 자유가 개발 전략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UNDP, 2004; 이태주 2014a).

주로 유네스코에 의해 주도되어온 문화 관련 의제가 2000년 UN이 정한 MDGs에서 빠지긴 했으나, 문화와 발전 논의가 유엔 전체 차원에서 핵심 의제로 떠오른 것은 2010년부터이다. 이는 문화가 개발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고 MDGs의 달성에 공헌한다는 내용의 MDG Summit의 2010년 결의안 “MDGs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Keeping the promise: united to achieve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채택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2010년과 2011년 유엔 총회에서 문화와 발전 의제에 관한 결의문(A/RES/65/166, A/RES/66/208)이 잇달아 채택되었는데 이 결의안들에서는 앞서 언급한 문화와 발전 관련 논의들이 다수 반영되었으며, 문화가 개인과 공동체를 위한 정체성, 혁신, 창의성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빈곤 퇴치의 중요한 요소로 경제 성장과 개발 과정의 개발 주권(ownership)⁹⁾을 제공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문화는 개발 계획에서 로컬 공동체, 민족, 국가가 능동적이고 특별한 역할을 하도록 권능을 부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공헌을 한다고 보고 있다. 이 결의문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환경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문화다양성과 생물다양성과의 관련성과 로컬 그리고 원주민의 전통적 지식이 긍정적으로 공헌할 수 있음을 인식함으로써 문화와 환경과의 관계도 다루고 있다(UN Resolution A/RES/65/166, A/RES/66/208).

2013년에는 유네스코 주최로 ‘항저우 문화와 발전

국제회의(The Hangzhou International Congress)’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열쇠로서의 문화(Culture: key to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주제로 중국 항저우에서 열렸다. 이는 유네스코가 1998년 스톡홀름에서 개최한 발전을 위한 문화정책 정부 간 회의 이후로 15년 만에 처음으로 문화와 지속가능한 발전간의 관계 초점을 맞춘 국제회의였다. 이 회의의 주된 목적은 Post-2015, 즉 MDGs가 끝나는 2015년 이후 유엔의 개발 핵심 아젠다에 문화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공감대를 형성, 확인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이 회의는 문화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요소임을 확인하였으며, MDGs와 같은 중요한 세계 개발전략에서 문화가 빠져 있음을 지적하고, 9개 항목의 구체적인 방안을 문화와 발전 관련 정책입안자들에게 권고함으로써¹⁰⁾ Post-2015 유엔 발전 의제에 문화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UNESCO 항저우 국제회의 홈페이지).

1998년 스톡홀름 회의와 비교해 2013년 항저우 회의에서 보이는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공동체의 강조이다. 1998년 회의에서 문화 향유와 창작의 권리를 포함한 문화권이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개인 차원에서 논의되었다면, 2013년 항저우 회의에서는 공동체 차원의 문화권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또한 1998년 회의에서는 사회의 각 구성원들이 처한 개인의 다양한 조건들의 차이, 즉 성, 계급, 민족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문화권을 누리는 환경 조성의 주체로 국가나 지방 정부의 역할이 강조된 것에 비해, 2013년 회의에서는 공동체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저작권 논의에서도 1998년 회의에서는 개인의 문화적 지식과 기술을 보호하는데 있어서의 저작권을 논의했다면, 2013년에는 무형유산과 같이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가지는 저작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박상미, 2013). 항저우 문화와 발전 국제회의의 결과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동인으로서 문화를 Post-2015 개발 아젠다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취지대로 같은 해인 2013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문화와 발전 결의문에 반영되기도 하였다(UN Resolution A/c.2/68/L.69).¹¹⁾

두 회의의 이러한 비교는 단지 스톡홀름 회의만과

의 단순비교라기 보다는 개발 프로젝트 패러다임과는 달라진 문화 개념을 제시했던 1980년대 이후 최근까지의 문화와 발전에 대한 그간의 전반적인 담론의 변화를 보여준다 할 수 있다. 그간의 논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의 인정이 필요하고 경제적 기준만으로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위한 개발에 도달할 수 없다는 점, 따라서 개발에 있어 문화를 중요한 요소로 파악해야 한다는 점, 문화적 권리를 인권의 필수적 구성요소로 인식하며 개발을 문화권의 관점에서 범분야 이슈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 문화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수적 요소이며, 동시에 발전을 위한 수단이 된다는 점, 문화가 개인과 공동체를 위한 정체성, 혁신, 창의성의 근원이며, 개발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며 개발주권을 작동하게 한다는 점, 문화와 발전에서 중요한 것은 공동체라는 점이 강조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의 발전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문화와 발전은 2015년 유엔이 정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에는 의제로 반영되지 못했다.

5. 문화와 발전 논의를 넘어: 관계적 장소 개념의 필요성

앞 절에서 소개된 문화와 발전의 논의 내용이 SDGs에 반영이 되지 못했지만 이런 논의들이 그간 개발의 실패 요인을 반영함과 동시에 다른 종류의 개발을 지향하고자 하는 노력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개발의 목표가 빈곤 퇴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동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 축인 경제, 사회, 환경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연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문화인 것도 부정할 수 없다(Hawkes, 2001). 또한 2011년 제안된 개발효과성 측면에서 개발도상국 주민의 삶의 질과 물질적 측면뿐만이 아닌 정서적 측면의 복지 증진, 개발의 자발성과 참여, 개발주권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제개발협력의 현장에서는 이러한 국제기구의 선언적 차원에서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공동체의 강조와 관련된 방향성 제시가 구체

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먼저 개발의 포괄적 개념 추구에 있어서 개발을 단순한 경제 성장의 맥락에서 이해하기보다는, 보다 만족스러운 지적, 감정적, 윤리적, 정신적, 문화적 존재를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지만 이를 개발의 효과로서 어떻게 측정할지는 개발 협력국(공여국과 수원국), 다자간 협력기구, 지방 정부,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 개발 NGOs 등 행위자마다 개념 규정과 측정의 수단이 다를 수 있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것도 다를 수 있다. 물론, 범분야 이슈로서의 문화적 접근법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개발 프로젝트 기획시에 개발 행위자와 파트너들이 각각 고려해야 하는 주요 질문들을 만들으로써 스스로 문화존중 및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툴킷(Toolkit)을 만들어 점검할 수도 있다. Commonwealth Foundation의 '문화존중 및 이해'에 관한 툴킷이 그 예에 해당된다.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가 다른 민간부문이나 정부와 비교했을 때,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요구를 대변하고, 궁극적으로 개발의 주체가 지역과 마을 주민들임을 주장하며 이들을 실질적으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시키는 노력을 경주해왔다는 측면에서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강화시키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신재은, 2014).

그러나 개발도상국에 대한 획일적이고 동질적인 유행화 전략에 대한 비판으로서의 문화 다양성 개념과 이와 관련된 공동체, 참여의 개념이 개발의 실천이라는 국면에서는 매우 모호하여 원래 지향하는 바대로 수원국 지역의 문화 다양성이 고려되고 그들의 요구에 맞는 방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기보다 여전히 많은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가 많다. 이것은 개발의 영역에서 발전되어온 문화 개념 자체가 한계를 가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개발도상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타자화' 과정을 통해 획일화된 문화가 국가 수준(개발도상국 간 문화 차이), 또는 지역 스케일(국가 내 문화 차이, 예를 들어 원주민 집단)에서 다양한 특성을 가진 것으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즉 문화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것은 맞지만, 여전히 이러한 문화 개념은 문화집단의 독특성과 동질성

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아이디어와 자본, 재화의 지구적 흐름은 국가적 경계를 가진 구별되고 분리된 독립체로서의 문화 개념의 유용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또한 최근의 국제이주의 증가된 이동성과 복잡성은 정적인 문화 개념에 가변성과 혼종성을 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포스트개발학자나 국제기구의 문화와 공동체 개념은 구별되고 독특성을 가진 - 물론 다양하지만 - 문화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Escobar는 세계를 다시 상상하면서 공동체적이고 상호협력적인 방식으로 차이에 대한 문화적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하지만(Escobar, 1995), 비서구 사회를 지나치게 낭만적으로 그린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사고는 포스트식민주의 사회의 다층적이고 미묘한 사회 현실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다.

문화와 발전 논의에서 언급되는 문화의 개념은 지리학의 '관계적 장소/공간' 개념과 같이 보다 개방적이고 관계적으로 재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Massey (1993; 1997; 2005)의 관계적 장소/공간관은 장소를 지리적 경계를 가진 고유한 특성을 지닌 것이라기보다 장소 내외부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 실천, 관계로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장소는 다양한 역사와 과정이 지층처럼 쌓이기도 하고 동시에 존재하기도 한다. 이 개념은 장소를 폐쇄적이고 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기보다 개방적이고 유동적인 것으로 본다. 이러한 관계적 장소 개념은 기존의 인본주의 지리학자들에 의해 제시된 본질주의적 장소 개념에도 균열을 내는 것으로, 이는 장소의 실체나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동질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숙진, 2016). 관계적 장소관은 문화와 공동체 역시 단일하고 동질적인 성격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외부와의 관계에 의해 구성되고 내부적 이질성을 갖기도 하며 살아 숨 쉬며 변화하는 것임을 함축한다. 관계적 장소관에 의해 재개념화된 문화에 대한 이해는 포스트식민 사회의 다양한 문화와 이질성, 혼종성을 인식하는데 보다 적절하다.

지난 20여 년간 개발과 연계된 원주민의 관계가 많이 변화하여 사업 계획, 시행 단계에서 이들을 포함하

고 원주민들의 특정한 문화 및 사회체계가 더 많이 고려되고 있지만,¹²⁾ 여전히 제대로 된 생계유지와 역량 강화(empowerment)의 측면에서는 많은 한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많은 경우 원주민 문화는 개발계획과 실행에 있어서 특정한 상상의 지리학에 입각하여 정책이 수립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발의 상상의 지리학은 문화가 로컬적이고 민족적으로 단일하며 젠더화된 분업에 기반하여 공간적으로 고정된 것이라는 시각을 반영하면서, 원주민 개발을 제한된 스케일, 공간, 사회집단으로 고정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Radcliffe and Laurie, 2006). Radcliffe and Laurie(2006)는 안데스 원주민 개발을 사례로 분석하면서 이를 원주민 개발의 공간적 조정(spatial fix)으로 개념화하였다. 개발의 공간적 조정을 통해 원주민을 단일한 개체로 인식하면서 엄청나게 다양한 인구에 대한 단일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발의 실천은 정체성과 문화 간 대화에 집중하겠다는 다양한 민족, 문화적 집단에게 모두 동일한 과정을 사용하며 문화적, 지리적, 정치·행정적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¹³⁾ 원주민 개발의 공간적 조정의 또 다른 측면은 도시에 거주하는 원주민에 대한 정책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남미에서 현재 작동중인 원주민 개발 패러다임 하에서 원주민, 즉 인디언은 늘 촌락의, 농민 생산자로 인식되며, 도시지역에 있는 많은 수의 원주민은 예외적인 특수한 경우이고 따라서 대부분의 인디언 인구들을 대표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 독특한 인디언 촌락지역을 분리해냄으로써, 많은 원주민 프로젝트는 원주민들의 생활을 보다 광범위한 경제적 과정과 행위자들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을 강화시킨다(Radcliffe and Laurie, 2006).

또한 독특하고 구별되는 문화의 개념과 함께 2005년의 문화다양성협약에서부터 이후 지속적으로 국제기구에서 제시된 문화를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인식은 문화의 상품화를 촉진하면서 시장지향적인 신자유주의 개발방식으로 쉽게 흡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런 시각은 원주민을 소규모의 기업가정신을 대표하는 개체로 보고, 이들의 독특한 문화에 기댄 다양한 수공예품이나 관광의 상품화를

통해 생산성 증대와 같은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즉 원주민 문화의 독특성이 시장성으로 평가되면서 개발의 원동력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NGO 주도의 사업은 신자유주의 개발 프로젝트보다 덜 시장지향적이고 차별 철폐 및 역량강화적 차원에 더 집중하긴 하지만 이들 역시 문화적으로 독특한 활동을 장려한다. 이는 빈곤의 해결책으로서 문화를 도구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로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천편일률적인('one size fits all') 문화정책으로 흐를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개념 또한 구별되는 문화를 보유한 존재로서, 그리고 개발 참여의 핵심 주체로서 강조되고 있는데, 공동체라는 것도 유형의 공간과 환경 속에서 규정되고 정의된다는 측면에서 내부적 혼종성과 다양성, 그리고 외부와의 관계, 즉 로컬을 넘어서는 다른 스케일에서 작동되는 정치, 경제, 사회적 구조와 행위와의 관련성 측면에서 보다 현실적으로 재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참여 또는 참여적 발전이라는 용어가 하향식 발전 전략을 옹호한 초기 개발 패러다임의 실패에 대하여 현장 운동가들과 비판적 학자들에 의해 사용되다가 주류 개발 진영이나 국제기구들에서도 전체 개발 과정에서 개발 프로젝트의 수혜자들이 소외된 점을 인정하면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개발 담론에 있어 참여적 요소의 등장은 시민이 사회의 문화적 그리고 사회·경제적 구조의 중요 부분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또한 역량강화는 아래로부터의 개발을 추동하고, 개발 과정에 있어서 주민 참여를 증대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실제 개발의 실천의 차원에서 발견되는 것은 참여의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거나 참여가 그 자체로 옳다고 생각하는 인식 때문에 사회적 변화에 필요한 구조적 개혁을 참여가 대체하는 경우가 있으며, 마을이나 공동체를 내부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동질적으로 보는 문제가 있다(Botchway, 2001). 캐나다-가나가 합동으로 재정 지원하는 북 가나 지역의 농촌 발전 프로젝트(NORRIP: Northern Region Rural Integrated Program)의 일환인 통합적 마을 물 프로젝트(Integrated Village Water Project)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주민 참여가 제도화되어지는 제도적·행정적 구조들을 분석한 Botchway(2001)는 물 프로젝트가 공동체와 마을들의 사회·경제·지리적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졌으며, 지속가능성을 위해 고안한 참여 개념과 이를 위한 제도적 과정이 지역공동체를 정책결정의 주체 보다는 개발을 위한 자원으로 격하시킴으로써 개발의 지속가능성도 담보하지 못하고 지역공동체의 참여도 제한적으로 그치게 된 것을 보여주었다. 즉, 북 가나 자치구들의 사회·경제·지리적 환경에 대한 분석은 빈곤의 근본 원인을 식민지, 그리고 포스트식민지 사회경제 정책에서 찾아야 하고, 이를 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구조적, 제도적 변혁이 동반되어야 함을 보여주지만, 가용한 자원들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공동체 참여가 그 지역에 필요한 구조적 개혁의 대용물이 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 참여가 가지는 본질적 선의에 도전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동체 참여는 국가가 의무를 회피할 합법적 기회를 부여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공동체 또는 마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공동체를 동질화, 객체화함으로써 마을 내 내부 정치, 실제 사회적 관계, 부의 분배 등의 문제로부터 관심을 돌려버리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리하자면, 문화적 위계 관계를 내포한 서구 중심의 일방적 개발에 대한 비판에서, 그리고 개발을 경제적 성장이라는 협의가 아닌 좀 더 포괄적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또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문화 개념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재개념화 노력들은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긍정적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관련 개념인 공동체와 참여 개념의 등장은 이전 개발 패러다임의 실패에 대한 반성과 이를 반영하려는 노력들로 일정 부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발의 실천의 국면에서 지역적 맥락에 놓여지게 될 때 이상적으로 선언된 위의 개념들의 유용성은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 특수하고 구별되는 존재로서 문화나 공동체가 개념화되기보다 지리학의 관계적 장소/공간의 관점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빈곤의 원인과 해결책을 공동체 참여로 대체하기보다 다양한 스케일에서 작동되는 정치, 경제, 사회적 구조와 행위와의 관련성 측면

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6. 결론

과거의 국제개발협력의 전후 냉전 체제라는 배경하에 선진국 중심의 개발 이론과 실천을 위주로 진행되면서 원조 수원국의 문화는 근대와 대비되는 전통으로 치부되어 타자화되고 동시에 저개발이라는 특징으로 동질화 과정을 거쳤다. 즉 과거의 냉전 체제는 부족한 자원에 대한 다수의 로컬 권리와 갈등, 그리고 민족적, 종교적, 민족 공동체간 문화적 다양성과 대립을 가려왔으며, 이러한 차이를 부정하는 개발의 방식은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화합 모두를 약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계속되는 원조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의 빈곤은 더욱 심화되거나 기존의 개발이론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개발의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고 과거의 개발 패러다임에 대한 회의가 존재하는 가운데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개발의 딜레마에 대해 대안과 돌파구를 찾는 과정에서 개발을 경제성장을 넘어서 총체적인 사회발전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등장했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개발 자체에 대한 접근법으로서 또 수단으로서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포스트개발 이론들은 2차 세계대전 후 생겨난 개발 사유의 역사적 차이를 제시하면서 유럽중심주의의 개발 개념을 파괴하고 동시에 포스트식민사회의 문화 회복, 지역 자체의 내생적 개발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대안적 개발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포스트개발 논의들과 함께 개발의 현장에 있는 많은 실천가들, 시민사회단체, NGO들 또한 문화다양성, 공동체, 여성, 개발주권, 참여를 강조하는 신포퐁리즘개발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다각적인 움직임은 점차적으로 개발 관련 국제기구들에도 반영되기 시작한다. UNDP는 1990년부터 인간개발보고서를 내면서 경제성장을 넘어서인 인간개발이라는 포괄적 개발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이후 1994년 인간안보, 2004년 문화적 자유 개념을

강조하면서 문화와 발전간의 긴밀한 관계를 명시하기에 이른다. 유네스코는 1980년대부터 문화 정체성의 다양성 존중, 동등함을 강조해 왔으며 이후 문화와 발전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환경이 개발의 주요 의제로 자리매김한 것을 준거로 하며, 유네스코는 지속적으로 문화다양성, 문화권과 같은 개념을 발전시켜왔으며, 공동체의 개발 참여의 동인으로서 문화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2000년대, 특히 2010년 이후로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목표 달성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문화를 강조하며 SDGs에 포함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결국 2015년에 채택된 SDGs안에 문화가 주요 의제로 포함되지는 못하였다.

SDGs의 주요 의제로서 문화의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그간 포스트개발이나 국제기구들에서 발전시켜온 문화와 발전간의 논의는 이전 개발 패러다임에서의 그것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좀 더 정의로운 개발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국제개발협력의 현장에서 다자간·양자간 기구에서 빈번히 나타나고 존중받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문화와 발전 논의에서 나오는 문화다양성, 공동체 참여, 역량 강화 등의 선언적 개념이 실제로 개발의 실천 국면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기구에서 발전되어온 문화와 공동체에 대한 개념이 본질적으로 구별되고 독특한 것으로 특정 지역에 고정되고 내부적 다양성을 외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지리학에서 발전되어온 관계적 장소/공간관을 통해 재개념화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관계적 장소관은 외부와의 끊임없는 접촉과 관계를 통해 문화와 공동체를 정적으로 고정된 것 이라기보다 항상 외부와의 관계를 통해 내부적 혼종성과 다양성을 가진 것으로 인식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런 관점은 개발의 대상과 주체가 되는 원주민의 다양성에 민감한 개발 정책을 고안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참여에 있어서 공동체 마을의 지나친 단순화를 피할 수 있고, 빈곤의 문제를 국가 또는 지역적 스케일의 문제로 환원시키기보다 좀 더 광범위한 정치, 경제적 맥락에 위치시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주

- 1) 한국은 1987년에 일본의 해외경제협력기금(OECF)을 모델로 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설치하였고, 1991년 일본국제협력사업단(JICA)을 모방하여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주된 해외원조의 형태는 유상원조였다. 2002년까지 유상원조가 무상원조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다가 2003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 분쟁지역에 대한 원조 확대를 기점으로 지원 추세가 역전되기 시작하였으며, 2014년 무상원조가 63.3%(883.7백만불), 유상원조가 36.7%(512.1백만불)를 차지했다.
- 2) 국제개발협력(IDC: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은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에 비해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위한 정부기관의 공적 자금 원조를 가리키는 ODA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 의한 원조와 파트너십, 다자간 협력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이다.
- 3) 개발 개념의 기원을 17세기 독일 철학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보려면, 당시 독일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17세기 전반에 일어난 종교전쟁인 30년 전쟁은 구교와 신교간의 대립으로 인해 발생했지만 후반으로 가면서 주변의 구교 국가들과 신교 국가들이 영토 확장과 같은 의도로 개입하면서 세계전쟁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30년 전쟁으로 전쟁터의 중심이 되었던 독일은 인구가 크게 감소하였고 국토가 황폐화되었다. 따라서 독일은 근대화 과정에서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낙후되었다. 당시 독일 사회는 중세 이래의 봉건적인 생활양식과 사회 형태가 남아 있으면서 동시에 근대화의 선두에 선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의 새로운 사고방식과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비동시적인 것의 공존' 상태로 특징 지워진다. 이러한 독일문화의 특징은 철학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호슬레(Hosle, 2013)는 독일 근세철학의 특징을 고대 양식을 모방하는 저자들과 근대화하는 저자들 사이의 경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이신철 역, 2015). 한 사람의 철학자에게도 이런 양면적인 모습이 드러나는데 라이프니츠가 현대 분석철학에 기여하기도 하였지만 스킨라 철학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었다는 점과 그의 초기 계몽주의적 세계 개선 프로그램은 그리스도 철학의 표현이었다는 점은 '비동시적인 것의 공존'을 보여준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 4)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가 주장한 대로 동양을 '타자(他者)'로 구성하고, 유럽을 '자아'로 구조화하는 것은 상호연관된 두 과정들이다. 즉 근대 유럽은 정치적, 문화적으로 스스로를 인식하기 위해서 재구성된 동양을 필요로 했다. 자아와 타자에 대한 인식은 서로 나눌 수 없는 조합

- 을 형성하는데 그 조합은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 없이는 존립하거나 기능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오리엔탈리즘을 구조화하고 그것의 역사적 지속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타자와 자아 간의 이분법이다. 개발 패러다임도 유사한 방식으로 기능한다. 구조적 이분법과 2항(項) 대립은 17세기 유럽에서 그것이 생겨날 때부터 쪽 개발 사고를 규정해왔고 오늘날 국제 개발 담론에서도 여전히 그러하다. 따라서 개발 패러다임의 기초는 양면적 의미에서 '차이'이다(Six, 2009, 1105).
- 5) 그러나 이후 1990년대 아시아와 2000년대 초반 남미 지역의 경제위기, 그리고 이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경제 개혁 처방의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개발 이론에서는 다시 정부의 역할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신제도경제학 또는 포스트워싱턴컨센서스에 주목하고 있다(한국국제협력단, 2014).
 - 6) 글로벌 남부에서 1970년대 외채와 원조에 의존한 국가 주도의 개발 정책이 실패하고 1980년대에 급기야 누적채무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국제기구는 금융원조의 대가로 신자유주의 개발 정책을 강요하였다. 글로벌 스케일에서 자본축적의 조건을 재정립하고자 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선진국과 국제기구들의 컨센서스에 의해 시장주도의 개발담론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켰다(이용균, 2015).
 - 7) 이보다 앞서 유네스코 정부 간 회의 중 최초로 문화만을 주제로 다룬 회의로 1970년에 베네치아에서 개최된 '문화정책에 관한 정부간회의'가 있다. 이 회의에서는 문화 발전이 사회, 경제적 발전의 필수요소이며, 사회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정체성을 우선 확립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위한 국가정체성의 확립을 강조하였다(이태주, 2014a). 따라서 근대화이론에 기반한 개발 프로젝트 패러다임 시기의 문화 인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8) 과거 개발원조가 개발도상국의 빈곤완화에 직접적으로 결부되지 않는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UNDP는 1990년부터 인간개발지수를 분석하여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를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인간개발지수는 기대수명, 성인문자 해독률, 1인당 국민총생산의 세 가지 지표에 근거하지만, 인간개발이라는 개념 자체가 양으로 측정할 수 없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인간개발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는데 의의가 있다. 1994년부터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 개념을 인간개발보고서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상태, 즉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경제적 소득을 획득할 기회를 가진다'는 것을 뜻한다. 이 개념은 외부의 군사적 침입과 관련한 전통적 안보 개념과 대응하는 것으로 정치적 자유, 사회적 안정, 환경권, 경제적 풍요, 문화권(文化權) 등 다양한 개념을 포함하는 개

념이다. 또한 인간안보는 자신의 개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국가, 세계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해주며, 참여적 개발의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인간안보를 구성하는 7가지 요소는 경제, 식료, 건강, 환경, 개인, 지역사회, 정치이다(UNDP, 1994).

9) 오너십(Ownership)을 국내에서는 주인의식이라고 번역하고, 일본에서는 자조노력이라고 번역하여 사용하는데 대해 이태주(2014b, 144)는 이러한 번역이 “개발도상국의 주민들을 게으르고 의존적이며 자조적이지 못하고 주체적 의식이 결여된 사람들로 규정하는 공여국의 편견과 태도가 깔려있는 오역”이라고 비판하면서, 오너십은 “개발의 주체와 주인이 개발도상국의 주민들 자신이라는 것이고 발전권이 주민들에게 있다는 인권법적, 규범적인 개념으로서 ‘개발주권’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 바 있다.

10) 항저우 선언의 9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발전 정책과 프로그램에 문화를 포함시켜야 한다. (2) 평화와 화해를 위해 문화 간 상호 이해를 추진해야 한다. (3) 사회의 각 계 각층을 아우르는 사회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전 성원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4) 빈곤을 퇴치하고, 사회의 전 성원에게 혜택을 주는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문화를 동원, 이용해야 한다. (5)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문화를 이용해야 한다. (6) 문화를 통해 재난을 이겨내고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7) 미래의 세대를 위해 문화의 가치를 깨닫고, 보호하고, 전승해야 한다. (8)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경영을 이루기 위해 문화를 자원으로 이용해야 한다. (9)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 문화의 힘을 빌려야 한다.

11) 2013년 유엔총회의 문화와발전 결의안에서는 문화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가지 측면, 즉 경제적 발전, 사회적 발전,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공헌함을 강조하였다.

12) 1980년대 후반부터 원주민 문화나 전통문화를 고려하는 것이 국제개발협력의 긍정적 사례로 여겨지고 글로벌화에 저항하는 가치로 여겨졌다.

13) 예를 들어 Radcliffe and Laurie(2006)의 연구는 안데스 시에라에서 원주민 개발이 일어난다고 상정하고 만든 안데스 정책을 아마존, 아프리카 에콰도르 원주민에게도 적용하였으나 전혀 적합하지 않았던 사례를 언급하였다.

참고문헌

김숙진, 2016, “아상블라주 개념과 지리학적 함의,” 대한지리학회지, 51(3), 311-326.

김태균, 2016, “국제개발에서 사회발전으로: 한국 사회의

국제개발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사회발전론의 재조명,” 경제와 사회, 109, 229-261.

박경환·윤희주, 2016, “개발 지리학과 국제개발협력(ICD)의 부상,”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8(3), 19-43.

박상미, 2013, “항저우 선언의 의의 및 논의의 경과,” 문화와 발전: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발전과 나눔의 첫 걸음(제2부), 13-18.

신재은, 2014, “문화개발협력의 포괄적인 시민사회 파트너십 추진 방안,” 2014 문화와 발전: 문화개발협력의 사례와 시사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75-107.

이신철(역), 2015, 독일 철학사: 독일 정신은 존재하는가, 에코리브르. (Hosle, Vittorio, 2013, Eine kurze Geschichte der deutschen Philosophie.)

이용균, 2015, “서구 중심적 개발담론의 재해석과 지속가능한 개발로서 포스트개발의 미래,”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1(1), 137-152.

이태주, 2014a, “문화와 개발협력: 한국의 중장기 정책 및 전략 방향,” 2014 문화와 발전: 문화개발협력의 사례와 시사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9-46.

이태주, 2014b, “문화와 발전을 위한 ODA 구상: 국제개발협력의 담론과 정책,” 국제개발협력, 1, 138-157.

정정숙, 2012, “문화권 관점에서 본 국제개발협력,” 문화와 발전: 포스트 MDGs 시대의 과제와 전망,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37-65.

조효제(역), 2013, 거대한 역설: 왜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가, 교양인. (McMichael, P., 2012,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A Global Perspective, SAGE Publication.)

한국국제협력단, 2014, 개발학 강의, 푸른숲.

Blaikie, P., 2000, Development, post-, anti-, and populist: a critical review, *Environment and Planning A*, 32, 1033-1050.

Booth, D., 1985, Marxism and development sociology: interpreting the impasse, *World Development*, 13(7), 761-787.

Botchway, K., 2001, Paradox of empowerment: reflections on a case study from Northern Ghana, *World Development*, 29(1), 135-153.

Corbridge, S., 1990, Post-Marxism and development

- studies: Beyond the impasse, *World Development*, 18(5), 623-639.
- Curry, G. N., 2003, Moving beyond postdevelopment: Facilitating indigenous alternatives for “development,” *Economic Geography*, 79(4), 405-423.
- Escobar, A., 1995, *Encountering development: the making and unmaking of the Third World*,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uhrer, H., 1996, The story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 history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and the 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 in dates, names and figures, OECD, Paris.
- Hawkes, J., 2001, The fourth pillar of sustainability: Culture’s essential role in public planning, Common Ground Publishing Pty Ltd., Champaign, IL.
- Kiely, R., 1999, The last refuge of the noble savage? A critical account of post-development,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 Research*, 11(1), 30-55.
- Massey, D., 1993, Power-geometry and a progressive sense of place, in Bird, J., Curtis, B., Putnam, T. and Tickner, N. (eds.), *Mapping the Futures: Local Cultures, Global Change*, Routledge, London, 59-69.
- Massey, D., 1997, A global sense of place, in Barns, T. and Gregory, D. (eds.), *Reading Human Geography*, Arnold, London, 315-323.
- Massey, D., 2005, *For Space*, Sage, London.
- Paris, R., 2001, Human security: Paradigm shift or hot air?, *International Security*, 26(2), 87-102.
- Pieterse, J., 2000, After post-development, *Third World Quarterly*, 21(2), 175-191.
- Radcliffe, S., and Laurie, N., 2006, Indigenous groups, culturally appropriate development, and the socio-spatial fix of Andean development, in Radcliffe, S. (eds.) *Culture and Development in a Globalizing World*, Routledge, Oxford, 83-106.
- Rostow, W., 1960,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A Non-Communist Manifesto*,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Schech, S., and Haggis, J., 2008, Culture and development, in Desai, V., and Potter, R., (eds) *The companion to development studies*, Hodder Education, London, 50-54.
- Schuurman, F., 1993, *Beyond the impasse: New directions in development theory*, Zed Books, London.
- Shuurman, F., 2008, The impasse in development studies, in Desai, V., and Potter, R., (eds) *The companion to development studies*, Hodder Education, London, 12-16.
- Sidaway, J., 2007, Spaces of postdevelopment,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1(3), 345-361.
- Sidaway, J., 2008, Post-development, in Desai, V., and Potter, R., (eds) *The companion to development studies*, Hodder Education, London, 16-20.
- Six, C., 2009, The rise of postcolonial states as donors: a challenge to the development paradigm? *Third World Quarterly*, 30(6), 1103-1121.
- UNDP, 1994, Human Development Report 1994,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UNDP, 2004, Human Development Report 2004,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Vandergeest, P. and Buttel, F., 1988, Marx, Weber, and development sociology: Beyond the impasse, *World Development*, 16(6), 683-695.
- Watts, M., 2003, Alternative modern-development as cultural geography, in Anderson, K., Domosh, M., Pile, S. and Thrift, N. (eds), *Handbook of Cultural Geography*, Sage, London, 433-451.
- UN, 2010, Resolution A/RES/65/166.
- UN, 2011, Resolution A/RES/66/208.
- UN, 2013, Resolution A/c.2/68/L.69.
- UNESCO 홈페이지_항저우 국제회의 <http://www.unesco.org/new/en/culture/themes/culture-and-development/hangzhou-congress/about-the-congress/>
- UNESCO, 1982, Mexico City Declaration on Cultural Policies.
- UNESCO, 1995, Our Creative Diversity.
- UNESCO, 1998,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n Cultural Policies for Development (Final Report).
- UNESCO, 2001,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 UNESCO, 2005,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김숙진

교신: 김숙진, 05029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이과대학 지리학과(이메일: sjkim@konkuk.ac.kr)

Correspondence: Sook Jin Kim, Department of Geography, College of Science, Konkuk University, 120, Neungdong-ro, Gwangjin-gu, Seoul, Korea 05029 (e-mail: sjkim@konkuk.ac.kr)

최초투고일 2016. 12. 4

수정일 2016. 12. 19

최종접수일 2016. 12. 29